

# 한국 국제정치학의 향후 과제들\*

전 재 성  
(서울대학교)

## < 차례 >

- |                          |               |
|--------------------------|---------------|
| I. 머리말                   | V. 고위정치와 저위정치 |
| II. 한국적 국제정치학과 지구적 국제정치학 | VI. 이론과 실천    |
| III. 이론과 역사              | VII. 맺음말      |
| IV. 안과 밖                 |               |

· 주제어: 국제정치학, 지역연구, 국제정치사, 외교정책, 규범이론 International Relations, Regional Studies, international history, foreign policy, normative theory

## 【한글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국제정치학계가 이루어온 성과를 돌이켜 보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정립 문제가 있다. 한국적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국제정치학은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 기반을 메타윤리학적 관점에서 보다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세계적 차원의 거시 변화를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정확히 분석하고, 보편적 설명이론의 성립과정에 한국 학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이론과 역사를 어떻게 보완적으로 종합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론과 역사는 양자를 종합할 수 있는 이론에 근거한 역사적 방법, 혹은 역사사회학적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원용한 방법을 활발히 사용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셋째, 지역연구 및 개별국가 연구와 국제정치의 연구를 종합하는 문제가 있다. 지역연구자는 국제정치학에서 논의하는 일반관계의 측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한편, 국제정치학자들은 지역 및 국가 연구의 성과를 일반이론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흡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책 연구와 국제정치학을 조화시키는 과제를 들 수 있다. 정책연구와 학문연구의 괴리는 궁극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양자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속에서 학자들 간의 참여윤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 논의, 그리고 관학연의 열린 협력을 통해 이론과 실천의 두 세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 대해 유용한 논평을 해주신 김재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I. 머리말

한국의 국제정치학이 안고 있는 과제는 실로 다양하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과제들의 우선 순위가 다를 것이고, 과제의 내용도 다르게 분석될 것이다. 20세기 들어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이 국제적으로 성립되면서, 한국도 해방 이후 근대적 의미의 국제정치학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고, 이후 각 시대별로 많은 발전과 동시에 미완결의 과제를 함께 겪었다. 21세기 초 세계 10위권을 넘보는 국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으로서 국력에 걸맞는 국제정치학의 수준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력이 축적되면서 사회 각 분야의 발전이 국제적 수준에서 평가받고, 타국의 모범이 될 공헌을 하는 마당에 한국의 국제정치학이 국제적인 학문업적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정립은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한국 국제정치학의 과제였다. 편협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국제정치학은 한국적이면서도 동시에 세계적인 수 있다. 국제정치학이 어차피 국제정치학자의 지식사회학적 기반을 반영하고 있을진대, 국제정치학의 보편성이 객관적으로 마련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겠으나, 문제의 본질에 더욱 접근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다루어갈 때, 상대적 보편성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국제정치학 역시 21세기 모든 국가들과 국제정치학자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구적 학문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는 보편적 공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한국의 역사와 현실에서 도출된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고, 그 과정에서 국제정치학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의 일면을 분석하는 것이 한국적이면서 국제적인 한국의 국제정치학을 만들어가는 길일 것이다.

한국 국제정치학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큰 과제들은 많은 것이 있겠으나, 이 논문에서는 본 특별호에 게재된 각 분과별 많은 논문들을 참고하여 제한된 관점이나마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국제정치학의 한국화라는 오래된 과제가 있다. 즉, 한국 국제정치학이 구미의 국제정치학 연구성과를 수입하면서 성장하여 왔다고 볼 때, 한국 국제정치학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한국국제정치학의 기반을 어떻게 다져나갈 것인가?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루는 분석대상의 한국적 연관성인가, 혹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 기반에 근거한 독특한 가치지향의 국제정치학인가? 한국적 국제정치학이라고 할 때, 지구적 학문주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돌이켜 보면, 한국의 국제정치학은 일방적 수입단계를 거쳐, 수입대체기, 비판적 수입과 변형기, 그리고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모색기를 거쳤다고 대별해 볼 수 있다.<sup>1)</sup> 국제정치학의 연구인력이 점증하여 가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이제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지역연구, 국제정치경제론, 외교정책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국제정치학의 필요성 여부, 개념, 내용, 연구방법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와 고민이

1) 박상섭, 하영선, “美國國際政治學의 趨勢와 韓國國際政治學의 狀況,” 『국제정치논총』 35-1; 하영선, “한국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방향 모색,” 하영선 편, 『현대국제정치이론』 (서울: 사회비평사, 1995); 전재성·박건영, “국제관계이론의 한국적 수용과 대안적 접근,” 『국제정치논총』, 42집 4호(2002) 등 참조.

나타나고 있다.<sup>2)</sup> 그리고 다양한 분과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한국 국제정치학의 일관된 문제 의식과 규범적 기반이 있을 수 있는지 질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역사와 이론 간의 관계설정의 문제가 있다. 21세기 초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치학의 모습이 다양하고 심대함에 따라 그 변화의 역사적 의미를 국제관계사의 거시적 흐름 속에서 판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사는 역사가들의 몫으로, 국제정치학 이론은 국제정치학자의 몫으로 나뉘어져 있는 현실이 연구의 진행에서 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이다. 양자의 합리적 역할분담은 옳으나, 학문적 성과를 종합할 수 있는 거시적 대책이 필요하다.<sup>3)</sup> 이는 한편으로는 국제정치사의 전공자와 국제정치이론 혹은 국제정치학 일반 전공 학자 간의 괴리로,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학과 사회과학계의 보다 큰 괴리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국제정치학이라는 분과와 다른 분과들과의 관계설정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제정치학은 국가 간 관계를 연구하는 분과로서 출발했지만, 각 정치집단 내부의 상황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즉 ‘안’과 ‘밖’을 함께 연구할 필요성으로 이는 정치학과 국제정치학, 지역연구와 국제정치학, 더 나아가 사회학 등 사회과학 제반분야와 국제정치학의 연계설정의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근대 국제정치학의 단위가 되는 국민국가를 합리적 단일행위자로 가정하면 분석적 편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0여개에 달하는 국가들 간의 질적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각 국가들, 지역들의 특수성에 대한 분석을,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

넷째, 안보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주제들 간의 관계 설정의 과제가 놓여 있다. 현재까지 국제정치학에서는 군사부문과 경제부문을 연결하여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안보연구자와 경제연구자 간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더구나 21세기에 들어 비전통적 안보, 인간안보의 이슈가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각 연구 분야별 연결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섯째, 국제정치학의 학문적 연구방향과 정책 연구방향의 조화라는 과제가 놓여있다. 학문적 접근과 정책적 대안은 쉽게 연결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정치학계는 끊임없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 사안에 대한 심도 있고, 장기적인 분석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버려둘 수 없는 문제이다. 더구나 학문과 실천 간의 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단기간에 격변하는 정책환경과 실제 외교정책의 영역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더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학문과 정책이 분리된 채 나아가기 보다는 정책연구의 패러다임을 국제정치학이 부분적이거나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보여진다.

2) 함택영, “한국 국제정치이론의 발전과 반성: 이론과 역사의 만남”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설립 50주년 학술회의 발표논문, 2006. 10. 28.

3) 하영선·김영호·김명섭 편, 『한국의교사와 국제정치학』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참조.

## II. 한국적 국제정치학과 지구적 국제정치학

“국적 없는 국제정치학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국제정치학이 강한 국가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한편으로는 연구자의 국가중심적 가치관 및 규범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정치학자들의 경험적 기반이 상이한 상황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규범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정치학의 설명이론이 표면적으로는 가치중립적일 수 있으나, 연구주제의 선택, 연구방법론의 선택, 실제 연구과정, 결론 도출 과정 등에 연구자의 가치, 특히 연구자가 속한 사회, 국민국가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배어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물론 연구주제 선택과정은 가치 내재적이고, 일단 시작된 연구는 가치중립적일 수 있다는 베버식의 사회과학 방법론의 시각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미의 국제정치학 연구 경향은 연구 진행과정과 결론 도출, 그리고 정책적 대안 제시과정에서 가치지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국제정치규범이론과 국제정치설명이론이 명확히 연결되지 못하고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제정치규범이론은 한편으로는 메타이론으로서 국제정치이론 혹은 국제정치적 언명의 규범성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정치와 관련된 규범적 주장을 제시하기도 한다.<sup>4)</sup> 그러나 사회과학에 대한 실증주의적 견해, 즉 사회과학과 국제정치학적 언명이 규범적 편향성을 반영하지도 않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는 견해가 국제정치규범이론과 설명이론 간의 관계를 불명확하게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이 깔고 있는 규범적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석적 왜곡 혹은 학문적 주제의 취사선택의 문제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상반되거나 충돌하고 있는 규범들 간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메타가치적, 메타윤리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정치의 변화 및 미래에 대한 규범적 언명을 설득력있게 만드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 실증주의적 메타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가치의 영역은 분석이 대상이 아니므로 국제정치학의 영역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치와 실재가 분리불가능하다는 규범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가치언명은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정치학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지게 된다.

가치지향성을 탈피할 수 없는 국제정치학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국제정치학사를 되돌아볼 때, 국제정치학이 패권국의 세계관리학이라는 문제해결적 관심에서 시작되었던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례로 호프만은 현재의 국제정치학이 미국의 사회과학이라는 타당한 지적을 한 바 있다.<sup>5)</sup> 국제정치학의 태동기에 국제정치학은 영국의 사회과학이었으며, 영국의 패권이 쇠락한 이후에는 미국의 사회과학으로 변화된 것이다. 만약 미래에 다른 패권국이 등장한다면, 새로운 문제의식과 현안을 다루는 또 다른 패권국의 사회과학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

4) Frost, Marvin, *Towards a Normative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Critical Analysis of the Philosophical and Methodological Assumptions in the Discipline with Proposals Towards a Substantive Normative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참조.

5) Hoffmann, Stanley. 1977/1995. An American Soci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Daedalus* 106, 3: pp.41-60.

가중심적 가치지향만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윌리슈타인의 지적처럼 지구적 계급관점에서 보면, 국제정치학은 특정 계급의 세계지배를 합리화하는 학문적 노력의 결과이자 지문화적 결론일 수도 있다. 또는 탈근대이론가들의 지적처럼, 권력정치적 담론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다.<sup>6)</sup>

그렇다면 200개에 달하는 국가들이 각각 200개의 다른 국제정치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가? 국제정치학은 국가 간 관계에 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하므로, 국제정치의 일관된 조직원리에 따라 국가 간 관계가 구성국가들의 특수성에 관계없이 보편성을 띠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개별 국가 간 다양한 관계 속에서 도출되는 보편성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별 국가들의 독특성 중 학문적으로 변수가 될 수 없는 부분을 사상한 보편성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성의 존재 자체와 관련된 질문이 남아있을 수 있다.<sup>7)</sup>

문제는 국제정치학을 보는 시각의 다양성, 권력지향성을 조정할 수 있는 메타이론적 기반을 확립하는 일이다. 국제정치학의 연구자가 벗어나기 매우 힘든 지식사회학적 규정성을 인정하고, 이를 비판적 관점에서 상호조정할 수 있는 지구적 국제정치학의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 국가별 국제정치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조정하는 길일 것이다.

한국 국제정치학의 규범적 과제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국제정치의 역사에서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뒤늦은 근대국민국가의 건설자로서, 저항적 민족주의가 강하게 남아있는 국가로서,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상대적 약소국으로서 한국은 무엇보다 생존이라는 가치를 중시하여 왔다. 그리고 생존의 가치는 안보와 평화, 그리고 강력한 국력의 축적이라는 가치로 연결되어 왔다. 이러한 가치적 입장은 국제정치이론에서는 현실주의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고, 주요 학문분과의 선별에서는 안보연구, 외교정책론, 평화연구, 남북관계론에 대한 집중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다른 지역, 다른 국가에서 한국이 중시하는 가치가 우선 순위를 가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환경, 인권, 지역공동체와 같은 탈물질적, 탈근대적 가치가 우선 순위를 가지는 선진적 지역이 존재하는가 하면, 여전히 근대국가 건설과 국민형성이라는 근대 이행의 가치가 우선 순위를 가지는 지역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이 중시하는 가치의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한국적 가치가 한국 국제정치학에 반영되는 기제에 대한 자기인식을 가지며,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치들의 위계에서 한국적 가치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설명이론을 올바르게 조망할 수 있는 메타이론으로서의 국제정치규범이론과, 올바른 가치를 주장하는 기반으로서의 국제정치규범이론을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로 연결된다.

국제정치학의 국적성은 다른 의미에서 경험의 특수성과 연결된다. 하나의 국제정치학 공동체가 겪어온 경험이 학문적 성과를 내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별, 지역별로 특수한 국

6) Wallerstein, Immanuel, *Unthinking Social Science: The Limits of Nineteenth-Century Paradigms* (Temple University, 2001); Foucault, Michel, *The Order of Things: An Archaeology of Human Sciences* (Vintage, 1994).

7) 이 점에 관해서는 민병원, “국제정치이론과 한국: 비판적 성찰과 제안” 『국제정치논총』 본 특별호 참조.

제정치학이 성립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적 국제정치학 역시 한국 국제정치의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도출된 학문적 이해와 연구성과를 담고 있어야 하는 당위가 있는 것이 물론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정치경험이 다른 국가들, 혹은 국제정치전체의 흐름에서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자의식을 전제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적 경험과 비판적 시각을 다른 국가들의 시각과 열린 자세로 연구할 수 있는 국제정치학의 메타이론 의식을 한국 국제정치연구자들 간에 확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국가의 국제정치학도 보편적일 수는 없다. 특히, 패권국, 구미의 국제정치학이 보편적일 수는 없다. 국제정치연구자들 간의 간주관성과 상호의사소통이 국제정치학의 공공영역 창출에 하나의 실마리일 뿐이다. 따라서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모색한다고 할 때, 한국적 특수성과, 지구적 소통가능성을 염두에 둔 열린 자세 확립이 향후 필요한 과정이라 보여진다.

현재까지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실증적, 설명이론적으로 앞서 있는 구미의 이론과 시각을 배워, 그 유용성의 혜택을 극대화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구미의 경험, 혹은 타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된 이론과 시각이 한국과 동아시아의 현실을 설명하는데 많은 괴리를 도출하거나, 혹은 이들 이론들이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적 지향이 우리의 연구에 질곡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유럽의 근대 이행기에 성립된 근대국제정치의 전개과정과, 이후 구미 국가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립된 국제정치학이 비유럽 지역의 경험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이론의 경우 선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타 지역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생겨난 조화지향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동아시아의 현실을 상대적으로 경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서유럽적 지역 통합이나, 미국적 국제제도 중시 경향이 한국과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의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가치지향에서도 이상주의적으로 비추어질 뿐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이 역사의 흐름을 학문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이 겪어온 국제정치적 역사 자체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1876년의 개항과, 1910년의 식민지화, 1945년의 급작스런 해방, 1990년대 탈냉전 등 한국의 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시적 변화들이 한국의 실제적 참여가 미약한 상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고, 이론적으로 반추할 여유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의 변화는 우선, 전통 국제질서에 대한 관심과 이해부족, 19세기 근대 이행기 국제정치학 연구의 미비, 식민지 시대 한국 국제정치에 대한 연구의 심대한 부족, 냉전적 국제질서 연구에 대한 구미정치학의 적용 등으로 이어졌다.<sup>8)</sup>

무엇보다 한국이 겪어온 다층적 변화의 본질을 정확히 분별하여 파악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한국이 겪어온 가장 큰 변화는 전근대에서 근대로,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거시이행이었다. 서구가 장기간에 걸친 거시이행을 겪어온 데에 비하면, 한국은 매우 짧은 시간에 거시이행을 압축적으로 겪어온 것이다. 세력배분구조의 변화도 겪었다. 다극구조에서 양극구조로, 그리고 또다시 단극구조에서 다극구조로 근대적 조직원리 속에서도 다양한 세력배분구조의 변화를

8) 김용구,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동양 예와 서양공법』 (서울: 나남, 1997) 참조.

겪어왔다. 하나의 세력배분구조 속에서도 여러 국면을 겪어왔다. 일례로 양극적 세력배분구조였던 냉전 질서 속에서도 대립기와 데탕트, 뒤이은 대립기를 차례로 겪어왔다. 탈냉전에 접어들어서도 1990년대의 상대적 평온기와, 21세기의 반테러 격변기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층위의 변화를 일관되게 파악하고, 이로부터 한국에 특수한 국제정치적 경험의 본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국제정치적 경험 중 국제정치학의 분석이 가장 어려운 것은 거시이행이다. 서구의 국제정치학은 근대 이행 이후, 국제정치적 근대 속에서 국가 간 관계를 학문적 주제로 삼아왔으므로, 탈중세 이행 혹은 근대이행의 과정 자체가 국제정치학의 주제가 된 적은 별로 없었다. 근대 이행론에 있어 1648년 베스트팔리아 기점설이 별 무리없이 받아들여져 온 것도 근대이행 자체를 문제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9세기 개항과 더불어 다가온 근대 이행은 대단히 폭력적인 과정이었고, 그 과정이 역사에 남긴 자취는 21세기 초 국제정치적 전개 과정에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실에서의 힘이 줄어들고 있더라도, 21세기 동북아를 논함에 있어 자주 19세기 국제정치경험이 언급되는 것은 여전히 비교적 준거로서의 근대 이행이 중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근대 이행부터 겪어온 거시 이행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국제정치학의 틀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이 수입해 온 서구의 국제정치학은 한국과 같은 거시 이행 과정의 문제를 현재에 간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1세기 한국 국제정치적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근대 이행기의 국제정치사를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전근대 국제정치, 혹은 전통시대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근대 이행의 토대가 되는 전통국제질서, 즉 천하질서 혹은 사대자소교린 질서에 대한 연구가 국제정치학 분야에서는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전통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이해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중국 중심 질서, 혹은 화이질서로 개념화되어 온 동아시아 전통 지역질서의 본질을 국제정치학적 개념과 이론으로 조명함으로써, 현재 동아시아가 겪고 있는 지역질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거쳐 전통질서에서 벗어나 근대 이행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는 여전히 전통질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근대 이행 본질의 특질은 전통과 근대의 복합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역질서가 근대 이행, 근대, 탈근대의 삼중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 전통질서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분석이 현재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초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전통질서에 대한 외교사적, 국제정치이론적 분석은 탈근대 거시이행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원형적 국제정치관 및 문명관 분석을 위해서도 향후 매우 필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동북공정 등 과거 질적으로 다른 국제정치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정책적 대응 역시, 전통질서에 대한 정확한 국제정치학적 분석을 배경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질서에서 한국의 대중 외교, 혹은 강대국 외교의 원형을 사대주의라고 막연하게 규정하는 것은 현재의 대미 외교 및 주변국 외교에서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 국제정치적 장 속에

서 벌어지는 국제정치적 사회화 기제, 혹은 아비투스<sup>9)</sup>를 검증되지 않은 전통질서에 대한 인식으로 채색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근대 이행의 동아시아 지역적 특수성, 미완된 근대 이행이 가져온 전근대와 근대의 중첩성의 사실은 유럽 근대지역질서의 팽창으로서의 근대 지구 질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학문적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의 국제정치학은 전형적이고 선진적인 근대 질서 속의 국가들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서구 질서 전파의 대상이 된 제3세계 지역의 지역질서를 이해하는 데에는 완전한 길잡이가 될 수 없다.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복합적, 중첩적 성격을 비교국제체제론적 입장에서 밝힘으로써, 비유럽 지역의 지역질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 시대를 거친 이후 20세기 후반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현실을 이해하는데, 현재의 국제정치학은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전형적 근대 질서에 상대적으로 가장 근접한 냉전 질서와 탈냉전 초기의 질서 속에서 기존의 국제정치학 이론은 양극질서의 본질 및 양극 질서 속의 동아시아 국가들 간 관계, 그리고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이행하는 세력배분구조의 변화 속에서의 다양한 동아시아 국제정치적 현상들을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물론, 동아시아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서구 국제정치학의 적실성이 한계를 가지는 것이 사실이었으나, 20세기 후반 전후의 시대와 비교하면 그 적실성은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고 하겠다.

21세기 초반 한국과 동아시아가 겪고 있는 국제정치현실을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은 향후 한국 국제정치학이 겪게 될 가장 큰 어려움과 도전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9.11 테러 이후 반테러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21세기 국제정치는 탈근대이행을 겪고 있다고 일각에서 논의된다. 테러의 발발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기존의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 미패권 구조의 강화라는 다양한 거대 조류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대응은 기존 국민국가의 주권에 기초한 근대적 국제정치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권적 개입론의 강화와, 비국가 행위자들에 대한 군사적 억지 불가능성에 기초한 군사적 선제공격론은 이러한 변화의 가시적 예가 되고 있다. 16세기경 유럽에서 발생한 근대로의 거시이행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관찰은 이러한 변화에 기초하고 있다. 거시이행은 단위의 변화와 국제정치 조직원리의 변화로 측정될 수 있다. 반테러 국면, 미국 세계전략의 변화는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초국민국가, 혹은 일각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와 같이 21세기 미제국의 등장과 같은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의 경우, 현재의 국제정치가 1648년 베스트팔리아 조약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논의하면서, 국제정치가 아닌 지구정치가 도래하고 있음을 논하기도 하였다.<sup>9)</sup> 행위자의 차원에서 실감되는 탈근대 거시 이행의 단초가 국제정치연구자들에 의해 어떻게 분석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9) Rice, Condoleezza, "Realizing the Goals of Transformational Diplomacy: Testimony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Washington, DC, February 15, 2006); "Transformational Diplomacy"(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January 18, 2006) 등 참조.



미국의 변환의 세계전략이 탈근대 거시이행에 대한, 일국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눈여겨 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21세기, 혹은 근대로부터 탈근대로 이행하는 국제정치 변화 속에서 제국과 같은 단위가 필연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U와 같은 지역국가, 보다 자유주의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정착과 같은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10)</sup> 마치 유럽의 근대 이행기 국민국가 뿐 아니라 중세적 성격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던 스페인 제국, 이태리 도시국가, 그리고 네덜란드와 같은 상업적 공화국이 근대적 단위의 전형성을 얻고자 하는 경쟁을 벌였듯이, 21세기 초반에도 국민국가와 제국, 지역국가와 초국가기구 혹은 글로벌 거버넌스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의 탈중세 근대 이행과 관련된 역사사회학적 연구들, 주권론 등은 중요한 연구과제로 보여진다.<sup>11)</sup> 20세기 후반부터 강화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정보소통지식적 변화라는 거대조류들이 가져오는 탈근대 이행을 국제정치학 개념과 분석틀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향후 한국 국제정치학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sup>12)</sup>

한국의 경우, 지구적 차원에서 탈근대 이행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를 선진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일이 될 것이다. 이미 한국은 천하질서에서 국민국가질서로의 근대적 거시이행을 주체적으로 통과하는데 실패했고, 그 대가는 식민지시대였다. 앞에서 논의한 근대 이행의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탈근대 이행이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은 향후 한국의 위상과 국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한국적 국제정치학 정립의 필요성을 논의함에 있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정치규범적 기반과 국제정치학적 경험이 보편화될 수 없는 특수성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볼 이유는 없다. 보편성은 각 특수성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미의 국제정치학이 보편화되는 것은 구미 경험의 특수성 속에서 보편명제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학문자원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이를 지구적 보편성과 연결할 때 한국적이면서 지구적인 국제정치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10) Barnett, Michael and Raymond Duvall. 2005. "Power in Global Governance." In Michael Barnett and Raymond Duvall, eds., *Power in Global Gover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erguson, Niall. 2004. *Colossus: The Price of America's Empire*. New York: Penguin Books; Krasner, Stephen D. 1999. *Sovereignty: Organized Hypocris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등 참조.

11) Downing, Brian, *The Military Revolution and Political Chan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Fischer, Markus, On context, facts, and norms: reply to Hall and Kratochwil. *International Organization* 47-3, (1993); Kim, Joon Suk, *Making States Federatively: Alternative Routes of State Formation in Late Medieval and Early Modern Europe*, Ph.D Dissertation, Chicago University, 2005.; Osiander, Andreas, *The States System of Europe, 1640-1990: Peacemaking and the Conditions of International stability*,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등 참조.

12) 이해정, "주권과 국제관계," 『세계정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 연구소, 제25집 1호 2004; 이해정, "웨스트팔리아와 국제관계의 근대성: 러기의 비판적 이해" 국제정치논총 42-2, 2002; 전재성, 「국가 주권의 재성찰」, 『세계정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 연구소, 제25집 1호 2004 등을 참조.

### Ⅲ. 이론과 역사

이론과 역사의 대립 혹은 갈등, 그리고 상호보완의 필요성은 비단 국제정치학계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니며, 또한 한국의 국제정치학계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sup>13)</sup> 사회과학 전반의 과제인 이론과 역사의 보완필요성은 국제정치학 방향설정을 논의할 때 중요한 논제가 된 지 이미 오래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한국 밖의 국제정치학계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완범은 ‘역사 없는 국제정치학’과 ‘이론 없는 한국외교사’가 한국국제정치학을 빈곤하게 만들었다면서 역사와 국제정치이론을 결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4)</sup>

양 분야가 서로를 바라 볼 때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양 분야가 과연 종합, 보완될 수 있는지, 외교사가와 국제정치학자들이 양 분야의 연구 성과를 어떠한 기준에서 종합할 것인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외교사가들이 볼 때, 국제정치학자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일반화와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료와 일차 자료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고 있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해를 보이고 있다. 국제정치학자들이 볼 때, 외교사들은 세부 역사사실에 근거하여 광범위한 일반화와 법칙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과거에 기초하여 현재를 이해하려는 시대적, 주제별 연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개디스와 같은 역사학자들은 보다 근본적으로 국제정치학자들의 사회과학적 일반화가 잘못된 과학관, 특히 뉴턴적 자연과학관과 이론관에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관과 이론관은 자연과학 내에서도 이미 낡은 것이며, 초보적 자연과학주의가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복잡계에 기초한 자연과학관을 가지고 있는 개디스는 진정한 자연과학주의는 자연과 사회적 대상에 대한 선진적 이론관 연구에 기초해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역사학이 오히려 더욱 과학적이라는 논의를 내세운 바 있다.<sup>15)</sup>

외교사와 국제정치학, 역사와 과학의 갈등을 보완하고자 시도하는 역사학자와 국제정치학자들은 한편으로는 사실과 사료에 대한 민감성을 보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적실한 범위 내에서 일반화를 시도하는 노력을 동시에 해나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과 사료를 이해함에 있어 일정한 개념과 이론적 틀이 불가피하다면, 단순한 이야기(narrative)가 아닌 다양한 수준의 이론에 근거한 역사(theory-focused history)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역사사회학적 접근은 이러한 노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도가 될 것이다.

한국 국제정치학의 발전을 논의할 때, 외교사와 국제정치학의 갈등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이 겪어온 외교사적 경험은 독자적인 국제정치학 분석틀에 의

13) 김영호, 「외교사와 국제정치이론 사이의 학제간연구의 쟁점과 과제-탈냉전기 미국의 대노쟁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 2호(2001); Colin Elman & Miriam F. Elman, eds., *Bridges and Boundaries*, (Cambridge, MA.: MIT Press, 2001) 참조.

14) 이완범, “한국외교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융성-쇠락-반성-부흥의 궤적” 『국제정치논총』 본 특별호 참조.

15) John Lewis Gaddis, *The Landscape of History: How Historians Map the Pa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해 분석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정치학자들은 외교사 사실과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여왔다. 외교사와 국제정치학의 갈등은 비단 국제정치학 분야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사, 동아시아사 등 분야의 역사학자와 국제정치학자들 간의 교류 부진은 역사학과 국제정치학 양자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동아시아와 한국의 외교사에 비해, 서구 외교사의 연구는 전반적으로 더욱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구미 외교사에 대한 연구는 현재 서구 국제정치학자들에게도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탈근대 이행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국제정치학도 서구의 외교사에 대한 구미 학자들의 이행에 지나치게 기대지 말고, 독자적인 연구성과를 축적함으로써 지구적 차원에서의 국제정치학 논제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의 흐름과 연구 주제별로 살펴볼 때, 19세기 근대 이행기의 외교사는 국제정치학자들에 의해 비교적 활발하게 분석되고 있으며, 역사학계와의 연계도 부분적으로 다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양문명의 전파가 어떠한 경로로 흡수되었고, 이러한 전파과정의 실제의 국제정치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연구하는 주제이다. 특히 두 문명의 충돌과, 두 국제정치 조직원리의 충돌은 현재의 구미국제정치학으로는 분석되기가 어렵고, 역사사회학적 접근, 비교국제사회론 접근으로 가능한 매우 거시적인 문제이다.<sup>16)</sup> 현재 세계적인 국제정치학의 연구 분야가 문명충돌 및 국제체제의 거시적 변환 연구에서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므로, 한국의 근대이행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분석은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정리 뿐 아니라, 서구 근대 국제정치의 확산 분석과 제3세계 지역질서의 변화라는 점에서 보편적 연구주제로 정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이 경험했던 20세기의 국제정치는 근대주권국가 간 관계였으나, 동북아시아의 상대적 약소국으로서의 경험이었다. 따라서 약소국이 경험한 외교사를 강대국이 수립한 국제정치학의 틀 속에서 분석하는 것이 많은 부조화를 노정하여왔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학이 학문분과로서 구미에서 자리잡은 후, 근대국제질서 속에서의 약소국 국제정치에 대한 분석은 매우 제한된 형태로만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분석은 강대국 간 국제관계의 현실에서 도출된 연구이며, 이는 강대국이 필요로 하는 연구주제라는 측면과 3세계와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야기하는 불편함이라는 측면에 기인한 현상일 것이다. 20세기 냉전사는 논자에 따라서 두 초강대국과 다른 국가들의 진영대립 국제정치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1917년 미국의 1차 대전 참전과,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 등장한 미소 두 제국의 80여년에 걸친 각축의 역사로 분석될 수도 있다. 개디스의 경우, 20세기는 윌슨과 레닌이 정초한 두 제국 간의 갈등의 역사라는 냉전사학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sup>17)</sup> 이는 20세기의 국제정치가 200여개에 달하는 국민국가 간 관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두 제국의 각축과 세력권 다툼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점

16) Stephen Hobden and John M. Hobson, eds., *Historical Soci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참조.

17) Gaddis, John Lewis, *We Now Know : Rethinking Cold War History*, 박건영 역,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 (서울: 사회평론, 2003) 참조.

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경험한 국제정치적 20세기는 미소 간의 냉전 대립을 첨예하게 체험한 시간이었으며, 이는 구미 국제정치학의 기본 패러다임들, 특히 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 분석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를 국제정치학적으로 연구하는데 있어, 한국적 문제의식과 분석틀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자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1세기 초 한국이 당면한 국제정치적 현안들은 매우 다양하다. 일본, 중국과의 역사분쟁, 영토분쟁, 통일과 남북관계로부터, 동북의 변화하는 세력균형과 세력전이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추구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 그리고 탈근대적 군사변환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변환 및 동맹구조조정 문제 등 다양한 과제들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제들의 성격이 구미 국제정치학으로 분석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역사분쟁과 영토분쟁, 통일의 문제는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국주의의 기억과 정체성 정치, 국민국가 완성의 과제가 어우러진 문제이다. 동북아 세력균형 속에서 겪고 있는 외교정책의 고민들은 전형적인 근대적 국제정치의 과제이다. 21세기 초 빠르게 변환하는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한국의 대미 정책 과제는 탈근대 이행과 연관된 문제이다. 거시적 시대 단층의 중첩과 복합 속에서, 유럽이 장기간 경험한 근대에서 도출된 국제정치학으로 한국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근대적 시각 하나로, 근대 이행/근대/탈근대의 문제를 엮어내는, 무리한 시각이다. 그러나 거시적 이행의 중첩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이론이 현재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한국이 당면한 국제정치의 문제를 국제정치학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역사에 대한 분석, 이를 국제정치학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의 마련,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문제의식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향후 국제정치학은 구미의 외교사와 동아시아 외교사, 한국외교사를 연결시켜 연구할 수 있는 국제관계사 연구의 심화와, 국제관계사 연구를 국제관계이론의 연구와 연결시킬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한국적 경험이 세계적 보편성을 가질 수도 있고, 한국적 국제정치학이 국제정치학의 표준정립에 기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국제정치학계는 역사학과 국제정치학계의 거리, 서양외교사와 동양외교사, 한국외교사 연구 간의 거리, 그리고 외교사 연구자와 국제정치이론가 사이의 거리가 여전히 멀다. 그리고 이를 종합할 수 있는 거시적 필요성에 대한 합의도 도출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종합이 한 두 사람의 학자에 의해 성취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한국 국제정치학계라는 학문적 공동체 속에서 분업과 협조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미의 국제정치적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독특한 문제가 한국과 동아시아에 있다는 인식 하에, 그 특수성을 풀어갈 수 있는 학문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구에서 만들어진 국제정치학의 연구업적을 보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비판하면서 수용하고,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 IV. 안과 밖

지역연구와 비교정치는 정치학의 중요한 분야로, 특히 ‘안’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는 점에서 국제정치 분석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그러나 국가 간 관계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국제정치학과, 단위들 혹은 지역들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지역연구 및 비교정치는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데 종종 많은 도전에 직면한다. 한국의 국제정치학계에서도 지역연구와 국제정치학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국제정치학자들은 국가별, 지역별 내부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국제정치연구의 분과와 지역연구를 함께 하기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지역연구의 경우, 전공대상인 지역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다보면, 국가별, 지역별 외교정책 및 국제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을 지속하고, 이를 국제정치학에서 연구하는 일반적인 관계학과 연결시키기가 그리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제정치전반에 대한 연구보다는 외교정책 연구가 주를 이루게 되어, 두 분야의 종합이 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개인의 연구활동의 범위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를 국제정치학계, 혹은 정치학계 전반의 차원에서 협력을 통해 해결해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sup>18)</sup>

지역연구와 국제정치학의 연계를 수립하는 일은 비단 한국 국제정치학계만의 과제는 아니다. 구미 국제정치학계는 냉전의 종식에 즈음하여, 심각한 반성에 처해 왔다. 냉전의 종식이라는 국제정치 세력배분구조의 심대한 변화를 예측하는데 큰 한계를 보인 것이다. 특히 구조주의적 현실주의의 경우, 국제정치 구조라는 요인을 가장 큰 독립변수, 제약변수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자체의 변화, 즉 독립변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이론 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제정치변화 심급이 국내정치와 지역 차원에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이론수립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국제정치학은 지역연구와 국제정치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이는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 즉 개인 분석차원과 국가 분석차원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한국 국제정치학의 경우에도 한국과 주변국 관계, 남북관계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지역 및 국가연구가 국제정치학 연구와 연결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제정치학자들은 각 국가들을 합리적 단일 행위자로 가정하는 것을 넘어,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국의 국내정치, 정부 내 관료정치, 정부 이외의 행위자들의 영향력, 외교

18) 임성호, “지역학의 일부인가 정치학의 핵심인가: 미국정치연구의 성격과 과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설립 50주년 학술회의 발표논문, 2006. 10. 28.; 진창수, “한국의 일본학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설립 50주년 학술회의 발표논문, 2006. 10. 28.; 정재호, “한국에서의 중국정치 연구의 평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설립 50주년 학술회의 발표논문, 2006. 10. 28.; 박수헌, 신법식, “한국 러시아연구의 현황과 과제: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설립 50주년 학술회의 발표논문, 2006. 10. 28. 등 참조.

정책결정과정의 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변국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국제정치연구자는 지역연구의 성과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개인적 지식이 한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 및 국가 연구자는 국제정치전반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개별 국가 및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치현상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앞서 논한 미국의 변환전략을 국제정치학적 거시이행과 연결하여 미국 세계전략 변화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데 있어, 지역연구자는 국제정치학자와 상당한 인식의 편차를 보이는 일이 종종 있다. 더불어 중국, 일본, 혹은 다른 지역의 내부와 외교정책을 연구하는 지역연구자의 경우도,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시조류와 관계의 변화를 연구주제와 연결하는데 한계를 보이곤 한다. 따라서 한국과 주변국과의 국제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학과 지역연구가 긴밀히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남북관계 연구도 안과 밖의 문제가 제기되는 분야이다. 남북관계는 북한 전공자는 물론, 국제정치학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민족 간 관계이자, 국가 간 관계라는 이중적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매우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는 분석은 물론 정책 수립의 측면에서도, 국제정치학의 개념들과 이론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남과 북의 군사적 대립과 안보관계는 국제정치학이 가장 많이 공헌해 온 주제들 중 하나이다. 남과 북이 겪고 있는 군사적 대치관계와 안보딜레마, 동맹관계로 더욱 악화된 동맹과 안보딜레마의 상승작용, 군사적 억지, 전쟁과 평화의 가능성 등, 남북관계는 두 국민국가 간 관계에서 파생되는 국제관계의 측면을 상당부분 가지고 있다.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일례로 한국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경제적 협력관계 및 사회문화적 교류와 같은 저위정치 분야에서의 변화가 안보, 군사, 정치 분야에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 혹은 기능주의적 사고의 일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속된 남북교류가 북한의 자기정체성 및 대외관계의 규범과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구성주의적 사고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내부 작동 방식 및 대외관계를 상세하게 연구하는 북한연구와, 국민국가 간 관계의 여러 측면을 연구하는 국제정치학적 연구가 상호보완될 수 있다면 남북관계의 연구 및 한국의 대북 정책 연구의 부문에서 상호보완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정치학이 제공할 수 있는 분석적 이익을 위하여 남북관계를 국제관계로만 인식한다면 이는 민족문제라는 또다른 측면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남과 북의 통일, 혹은 민족분단의 해결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북관계를 분리된 두 개의 정치단위로 보는 분석적 시각은 향후의 한반도를 구상함에 있어 암암리에 통일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전제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대 국민국가의 영토보존의 규범이 확산되면서 20세기 후반부터는 병합의 정책이 국제적으로 용인되지 않고 있다.<sup>19)</sup> 그러나 남북통일은 독특한 민족분단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상대방의 병합이 여전히 합법적인 대외정책의 목표로 여겨지고 있다. 행위자들이 통일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분석적으로 고려하는

19) Mark W. Zacher, "The Territorial Integrity Norm: International Boundaries and the Use of Forc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5:2, (Spring, 2001) 참조.

것과, 정책차원에서 규범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우승지도 유사한 관점에서 일부 이론의 부정확하고 무리한 적용은 이론과 현실을 모두 죽이는 결과를 종종 초래한다고 보고 있으며, 단순한 국제정치이론의 적용이 아닌 한반도의 속적관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이론, 모델, 패러다임의 개발에도 힘써야 해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sup>20)</sup>

남북관계의 또 다른 측면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관계의 중요성이다. 남북관계는 주변 국가들의 대한반도정책은 물론, 국제정치적 거대조류, 그리고 국제기구와 같은 다양한 비국가행위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일례로, 북핵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궁구할 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들의 대한반도정책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국제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한반도사태를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도 한반도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분석과 북한연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 V. 고위정치와 저위정치

국제정치학은 안보 및 군사문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영역으로 설정해왔다. 따라서 고위정치라 함은 안보문제를 가리키고, 그 밖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는 저위정치로 일컬어 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의 상황은 기존의 고위, 정치의 구별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제와 사회, 문화, 혹은 비전통안보와 인간안보의 이슈가 군사안보보다 더욱 중요한 고위정치적 속성을 띠게 되었기 때문이다.<sup>21)</sup>

국제정치학은 성립 당시부터 전쟁과 안보문제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국제경제관계 및 사회문화, 이념의 관계는 안보에 비해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정치현실에서는 안보와 경제는 물론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의 이슈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세계적 시장자본주의의 성립, 냉전의 종식, 자원의 중요성 증가와 같은 새로운 조류와 더불어 국제정치학 분야의 다양한 소분과간 연결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의 국제정치학계에는 전쟁과 안보 연구 중심에서 점차 다양한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인력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특히 국제정치경제는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로 자리잡았다. 근래에 들어 환경, 인권, 여성, 테러, 문화, 지식, 기술등 과거 국제정치학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될 덜 받았던 분야들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 분야의 전문연구자들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냉전기, 특히 데탕트를 거치면서 군사와 경제 간의 긴밀한 연계성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군사적 강국이 경제적 강국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1970년대부터 국제정치경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통합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20) 우승지, “남북관계 연구: 검토와 과제” 『국제정치논총』 본 특별호 참조. 구갑우, “남북한 관계의 이론들,”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남북한 관계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도 참조.

21) 이신화, “21세기 글로벌이슈와 국제정치학” 『국제정치논총』 본 특별호 참조.

상호의존관계의 증가가 정치적, 안보적 관계 발전 및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었다. 특히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복합적 상호의존론과 통합이론은 이러한 소분과 간 연결을 시도한 성과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정치경제학은 국제정치학 일반이 겪어왔던 문제들을 함께 겪어왔다고 볼 수 있다. 김석우는 한국국제정치경제학이 서구 이론의 도입과 소개 중심, 대미편중 성향, 방법론적 저발전, 그리고 한국식 연구의 부족과 문제의식 부족 등의 특성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sup>22)</sup>

한국과 동아시아의 경우에도 군사와 경제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시장을 매개로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중국의 시장사회주의 발전과 중국 경제력 증강, 동아시아 국가 간 역내 경제관계의 강화는 정치적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관계의 독립변수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소위 정쟁경열과 같은 표현에서 보이는 상황을 표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 분석에 있어 정치와 경제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는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전공자와 국제정치경제 전공자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연구 환경이 많이 발전된 것은 아니다. 특히 국제경제를 전공하는 경제학의 영역과 국제정치학의 영역은 거의 대화와 협동연구 없이 연구가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국제정치학은 이러한 소분과 간 연계를 강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에 동아시아 공동체 혹은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논의를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 정책의도와 이슈영역 별 연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소분과 간 연계 강화는 필요한 과제이다.<sup>23)</sup>

21세기 들어 정보화가 진행되고, 국경을 넘는 새로운 인간안보의 이슈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국가의 역할, 국가 간 협조 및 국제제도의 필요성, 그리고 국가 이외 행위자들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관심 등이 증가하였다.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용어로도 표현되는 다층적 행위자들 간의 자율적 네트워크 형성의 현실은 기존 국제정치학의 안보중심 연구경향에 대한 탈피의 필요성을 요구할 뿐 아니라, 안보 이외의 영역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정치이론 및 시각의 정립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sup>24)</sup>

최근 들어 안보와 경제 이외에, 정보와 기술, 문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특히 국력의 표준을 논의할 때, 경성권력 위주의 시각을 탈피하고, 연성권력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연성권력론은 이념, 문화, 제도, 지식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이러한 영역이 정치, 안보, 경제와 연결되는 연결망도 주요 연구주제로 등장하였다.<sup>25)</sup>

22) 김석우, “한국국제정치학의 회고와 전망: 국제정치경제의 발전과정과 특성 분석” 『국제정치논총』 본 특별호 참조.

23) 손열 편,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서울: 지식마당, 2006) 참조.

24) 민병원, “문화의 국제관계: 네트워크 개념을 통한 이해,” 『국제정치논총』, 46집 1호(2006); 김상배, “정보화 시대의 외교: 개념화의 모색,” 『정치학회보』 36권 3호(2002) 등 참조.

25) Guzzini, Stefano, “The Concept of Power: a Constructivist Analysi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ume 33, Number 3, June 2005; Leander, Anna, “The Power



특히 정보통신기술 혁명 이후 대두된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국력표준들 사이에서 지식이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이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군사, 경제, 문화, 정치 등의 현상을 논의함에 있어서 지식이 미치는 영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다 넓게 살펴본다면, 연성권력의 망, 이념과 지식의 네트워크는 과거 국제정치학의 분석틀로 분석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연성권력론은 동북아의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에게 중요한 함의를 주는 이론으로 등장하였다. 경성대국의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이 연성권력의 강대국으로 등장하여 향후의 국제정치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한국이 지식과 규범, 문화의 영역에서 고차원의 한류를 이끌어 나갈 때, 정치와 군사, 경제에서 가지는 불리함이 보완될 수도 있을 것이다.<sup>26)</sup>

새로운 권력표준들의 작동방식은 또한 기존의 분석틀로는 분석되지 않는 문제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네트워크 이론과 복잡계 이론 등 새로운 이론들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정치학과 사회학, 정보학과의 협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sup>27)</sup>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향후 국제정치학에서 각 분과별의 상호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는 틀과, 더 나아가 이를 정책연구로 연결할 수 있는 국제정치학의 전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VI. 이론과 실천

현재 한국의 국제정치학계는 한국의 외교정책과 관련한 많은 주제들을 다양한 학술회의를 통해 점검하고, 분석하며, 미래의 외교정책을 위한 제언을 생산하고 있다. 한미동맹, 북핵을 둘러싼 6자회담, 주변국 외교 등 다양한 주제들이 국제정치학의 학문적 연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외교정책과 관련된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학계와, 정부, 그리고 연구소 간의 관학연 협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계가 문제의 거시적, 장기적 측면을 분석하여 외교정책의 정책환경 분석과 전략적 일관성을 위한 시각을 제시한다면, 연구소의 연구업적들은 구체적인 사안들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마련한다. 정부는 실제 정책 실행기관으

---

to Construct International Security: On the Significance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ume 33, Number 3, June 2005; Mattern, Janice Bially, *Ordering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outledge, 2004) 등 참조.

26) 하영선, 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서울: 을유문화사, 2006) 참조.

27) Ansell, Christopher K., "The Networked Polity: Regional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Governance*, 13(3), (July 2000), pp.303-333; Ansell, Christopher K., and Steven Weber, "Organizing International Politics: Sovereignty and Open System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0(1), (1999), pp.73-93; Arquilla, John, and David Ronfeldt, (eds.), *Networks and Netwars: The Future of Terror, Crime, and Militancy*, (Santa Monica, CA: RAND, 2001); Barabási, Albert-László, *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 (Cambridge, MA: Perseus Publishing, 2002) 등 참조.

로 주어진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정책에 대한 평가,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자문을 위해 학계와 연구소와 협력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제정치학계가 정책연구 및 제언과 관련하여 향후에 수행할 다양한 과제들이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 정책연구를 위한 학문적 패러다임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계가 좀 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부딪혀 있는 많은 외교정책의 사안들은 이론과 시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과정이다. 한국외교정책 연구의 행로를 보면 주로 현실주의 시각에서의 안보연구가 다수를 이루는 것이 사실이다.<sup>28)</sup> 그러나 향후 주어지는 외교정책의 주제들은 안보는 물론, 경제, 사회, 환경, 테러, 문화 등 비전통적 안보의 주제들도 중요한 주제로 부상할 것이다. 따라서 새롭고 다양한 정책 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학의 연구주제들이 문제의 성격을 미래지향적으로 이해, 분석하고, 한발 앞선 정책제언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각 소분과들의 통합연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연구를 위해서도 요긴할 것이다. 일례로 북핵사태를 둘러싼 분석과 돌파구 마련은 북한 연구와 같은 지역연구, 미국의교정책 연구, 주변국에 대한 지역연구, 그리고 국제정치학과 안보연구 등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잘 이루어 질 수 있다. 정책은 현실을 둘러싼 종합적 판단에 기초해야 하므로, 국제정치학의 소분과들이 평소의 연구방법에서 분리되어 있다면, 현실적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도 협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학문적 주제들을 둘러싼 평소의 분야별 협력이 정책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관학협력에 있어,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관학 협력의 진정한 과정보다는 자료의 제한적 공개, 간헐적인 정책 관심,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형식적인 관학협력이나, 당장의 필요에 따른 협력이 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과정과 학문적 분석과정이 평시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인력의 구성과 주제를 다루는 방법에서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이미 실행된 정책들에 대한 정확하고 학문적인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정치학자들의 경우, 필요와 요청에 따라 정책환경 분석, 정책 제언에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건들이나 사용한 정책들을 학문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일이 한계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최근의 사건에 대한 자료적 접근의 제약과, 현실적인 수요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정부의 경우 최근의 외교정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과 분석보다는 당장 닦친 사안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의 정책 분석을 위해서도 비교적 최근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바, 국제정치학적 분석이 유용하게 공헌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무엇보다 정책연구와 국제정치학적 학문활동 간의 연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이견들을 조정해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자들에 따라 정책연구의 필

28) 김태효, “한국 외교정책 연구: 회고, 동향, 그리고 제언” 『국제정치논총』 본 특별호 참조.

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른데, 이것은 학문관과 국제정치학의 특성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차이점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국제정치학의 공동체가 정책 연구에 학문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토론을 통해 결론이 마련되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진다.

## Ⅶ. 맺음말

본 논문은 제한된 관점에서나마 한국 국제정치학이 현재까지 당면해온 문제들을 대별해 보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된 이유와 향후의 방향에 대해 대략적으로 논의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본 특별호에 게재된 각 분과별 논문들을 참조하여 보았다. 21세기 초 국제정치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국제정치학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심각한 것들이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이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통해 성과를 축적하여 왔으나, 여전히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한국의 국제정치현실을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학문적 성과를 생산하는 데에도 또한 한계를 보여왔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적 국제정치학과 세계적 국제정치학의 관계 설정 문제, 국제관계사와 국제정치학, 특히 역사와 이론을 종합하는 문제, 지역 및 국가 연구와 국제정치연구의 설정, 즉 안과 밖의 관계 설정 문제, 안보 중심의 연구방법과 보다 광범위한 이슈영역 연구방법의 종합 문제, 그리고 국제정치학의 학문적 주제와 한국 국제정치의 현실이 당면하고 있는 정책적 과제를 종합하는 문제들로 요약해 볼 수 있었다.

한국적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국제정치학은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 기반을 메타윤리학적 관점에서 보다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세계적 차원의 거시변화를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정확히 분석하고, 보편적 설명이론의 성립과정에 한국 학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론과 역사는 양자를 종합할 수 있는 이론에 근거한 역사적 방법, 혹은 역사사회학적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원용한 방법을 활발히 사용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지역연구 혹은 개별국가 연구자는 국제정치학에서 논의하는 일반관계의 측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한편, 국제정치학자들은 지역 및 국가 연구의 성과를 일반이론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흡수해야 할 것이다. 정책연구와 학문연구의 괴리는 궁극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양자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속에서 학자들 간의 참여윤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 논의, 그리고 관학연의 열린 협력을 통해 이론과 실천의 두 세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구갑우, “남북한 관계의 이론들,”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남북한 관계론』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5).
- 김석우, “한국국제정치학의 회고와 전망: 국제정치경제의 발전과정과 특성 분석” 『국제정치논총』 본 특별호.
- 김영호, 『외교사와 국제정치이론 사이의 학제간연구의 쟁점과 과제-탈냉전기 미국의 대는쟁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 2호(2001); Colin Elman & Miriam F. Elman, eds., *Bridges and Boundaries*, (Cambridge, MA.: MIT Press, 2001).
- 김용구,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동양 예와 서양공법』 (서울: 나남, 1997) 참조.
- 김태효, “한국 외교정책 연구: 회고, 동향, 그리고 제언” 『국제정치논총』 본 특별호.
- 민병원, “국제정치이론과 한국: 비판적 성찰과 제언” 『국제정치논총』 본 특별호.
- 민병원, “문화의 국제관계: 네트워크 개념을 통한 이해,” 『국제정치논총』, 제46집 1호(2006); 김상배, “정보화 시대의 외교: 개념화의 모색,” 『정치학회보』 제36권 3호(2002).
- 박상섭·하영선, “美國國際政治學의 趨勢와 韓國國際政治學의 狀況,” 『국제정치논총』 제35권 1호.
- 박수현·신범식, “한국 러시아연구의 현황과 과제: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설립 50주년 학술회의 발표논문, 2006. 10. 28.
- 손 열 편,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서울: 지식마당, 2006).
- 우승지, “남북관계 연구: 검토와 과제” 『국제정치논총』 본 특별호.
- 이신화, “21세기 글로벌이슈와 국제정치학” 『국제정치논총』 본 특별호.
- 이완범, “한국외교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융성-쇠퇴-반성-부흥의 궤적” 『국제정치논총』 본 특별호.
- 이혜정, “웨스트팔리아와 국제관계의 근대성: 러기의 비판적 이해” 『국제정치논총』 제42권 2호(2002).
- 이혜정, “주권과 국제관계,” 『세계정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 연구소, 제25집 1호(2004).
- 임성호, “지역학의 일부인가 정치학의 핵심인가: 미국정치연구의 성격과 과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설립 50주년 학술회의 발표논문, 2006. 10. 28.
- 전재성·박건영, “국제관계이론의 한국적 수용과 대안적 접근,” 『국제정치논총』, 제42집 4호(2002).
- 전재성, 「국가주권의 재성찰」, 『세계정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 연구소, 제25집 1호(2004).
- 정재호, “한국에서의 중국정치 연구의 평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설립 50주년 학술회의

- 발표논문, 2006. 10. 28.
- 진창수, “한국의 일본학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설립 50주년 학술회의 발표논문, 2006. 10. 28.
- 하영선, “한국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방향 모색,” 하영선 편, 『현대국제정치이론』 (서울: 사회비평사, 1995).
- 하영선 · 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서울: 을유문화사, 2006).
- 하영선 · 김영호 · 김명섭 편, 『한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 함택영, “한국 국제정치이론의 발전과 반성: 이론과 역사의 만남”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설립 50주년 학술회의 발표논문, 2006. 10. 28.
- Ansell, Christopher K., “The Networked Polity: Regional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Governance*, 13(3), (July 2000), pp.303-333.
- Ansell, Christopher K., and Steven Weber, “Organizing International Politics: Sovereignty and Open System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0(1), (1999), pp.73-93.
- Arquilla, John, and David Ronfeldt, (eds.), *Networks and Netwars: The Future of Terror, Crime, and Militancy*, (Santa Monica, CA: RAND, 2001).
- Barabási, Albert-László, *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 (Cambridge, MA: Perseus Publishing, 2002).
- Barnett, Michael and Raymond Duvall, “Power in Global Governance.” In Michael Barnett and Raymond Duvall. eds., *Power in Global Gover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Downing, Brian, *The Military Revolution and Political Chan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Ferguson, Niall, 2004. *Colossus: The Price of America's Empire* (New York: Penguin Books, 2004).
- Fischer, Markus, On context, facts, and norms: reply to Hall and Kratochwil. *International Organization* 47-3, (1993).
- Foucault, Michel, *The Order of Things: An Archaeology of Human Sciences* (Vintage, 1994).
- Frost, Marvin, *Towards a Normative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Critical Analysis of the Philosophical and Methodological Assumptions in the Discipline with Proposals Towards a Substantive Normative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Gaddis, John Lewis, *We Now Know : Rethinking Cold War History*, 박진영 역, 『새로 쓰

- 는 냉전의 역사』 (서울: 사회평론, 2003).
- \_\_\_\_\_, *The Landscape of History: How Historians Map the Pa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Guzzini, Stefano, "The Concept of Power: a Constructivist Analysi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ume 33, Number 3, June 2005.
- Hobden, Stephen, and John M. Hobson, eds., *Historical Soci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Hoffmann, Stanley. 1977/1995. An American Soci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Daedalus* 106, 3: pp.41-60.
- Kim, Joon Suk, *Making States Federatively: Alternative Routes of State Formation in Late Medieval and Early Modern Europe*, Ph.D Dissertation, Chicago University, 2005.
- Krasner, Stephen D., *Sovereignty: Organized Hypocris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 Leander, Anna, "The Power to Construct International Security: On the Significance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ume 33, Number 3, June 2005.
- Mattern, Janice Bially, *Ordering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outledge, 2004).
- Osiander, Andreas, *The States System of Europe, 1640-1990: Peacemaking and the Conditions of International stability*,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Rice, Condoleezza, "Realizing the Goals of Transformational Diplomacy: Testimony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Washington, DC, February 15, 2006).
- \_\_\_\_\_, "Transformational Diplomacy"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January 18, 2006).
- Wallerstein, Immanuel, *Unthinking Social Science: The Limits of Nineteenth-Century Paradigms* (Temple University, 2001).
- Zacher, Mark W., "The Territorial Integrity Norm: International Boundaries and the Use of Forc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5:2, (Spring, 2001).

## Future Tasks for Developing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South Korea

Chun, Chae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takes issue of how International Relations in South Korean as an academic field in social sciences find its own identity not only for South Korea, but also for global academia. Four issues have been explored: first, the definition and identity of “Korean” International Relations; second, the way of building a bridge between international hist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ird, the issue of combining regional studi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ourth, the issue of harmonizing two worlds of practitioners and scholars. To find “Korean” way of studying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crucial to ponder upon the normative basis of a field and to find a possibility for universalism. Theory-focused history, or historically sensitive theory building might be a way of building a bridge. Scholars in regional studi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ed to learn from each other by using common concepts and variables. Practitioners and scholars need to agree upon the normative basis of using social knowledge and an ethic of social participation.